

민주 도지사 후보들, 합동연설회 앞두고 전북서 기자회견

# 안호영 “경선 참여 곧 전북 변화 출발점”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참여가 곧 전북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도민과 당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안 후보는 “전북도지사 경선이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며 “이번 선거는 전북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해야 전북이 바뀐다. 한 표는 작지만 결과는 크게 바뀐다”며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안 후보는 경선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후보 등록 이후 곧바로 경선이 시작되는 일정으로 도민들이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선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며 “지방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시대에 전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기반 산업과 반도체·AI 산업의 지방 이전 흐름 속에서 전북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전북도정과의 연속성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김관영 전복지사와의 협력을 언급하며 “성과는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다”며 “민선 9기 도정은 하나의 팀으로 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참여가 곧 전북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도민과 당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 “전북의 미래 방향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 반도체 전북 등 8대 비전도 전면 공개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는 “20년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약자의 편에서 왔다”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서 에너지 정책을 설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책적으로는 용인 반도체 새만금 유치, KAST 전북 캠퍼스 공공의대 설립, 미래랜드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전북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경쟁 구도와 관련해서는 “2014년

이후 과거 도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언급해 경쟁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안 의원은 8대 비전과 48개 공약도 전면 공개했다.

이번에 제시된 8대 비전은 △반도체 전북 △전북형 재생에너지 순환 경제 △중부권 시대 도약 △전북 30분 통행생활권 교통망 △SI·기본사회 선도 도시 △한류특별시 전북 △농생명산업경제 구축 △전북형 광역 정부 체제 구축 등이다.

/이만호기자

# 이원택 “도민 참여로 전북 대전환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발전 구상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당원 동지의 참여로 전북 대전환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 ‘내발적 발전 전략’ 전환 필요성 강조 재생에너지 등 7대 프로젝트 제시도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안호영 후보와 경선 중인 이원택 의원이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발전 구상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전북 만들기를 제 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과 당원 동지들의 참여로 전북 대전환의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전북이 인구 감소와 지

역 소멸 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기존의 외부 투자 의존형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7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우선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도민 소득을 직접 높이는 ‘햇빛·바람 연금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재생 에너지 생산을 대 폭 확대하고, 개발 수익을 기금화해

도민에게 연간 최대 1천만 원 수준의 소득을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연 매출 1,000억원 규모의 전북형 스타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대규모 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개발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해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그는 디지털 기반 유통망 구축과 저금리 금융 지원, 공공 배달업 확대 등을 통해 골목 상권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래 산업 육성 전략으로는 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2040년까지 대규모 재생 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그린 수소·AI·농생명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북을 첨단 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완공, 식품·에너지 특화 향단 조성, 문화·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프로야구 11구단 유치와 복합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체류형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광역 교통망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전라선 고속화 및 신규 노선 구축, 익산역 중심 광역 환승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만호기자

# “김관영 제명 철회하라”... 전북 시민·사회단체 “도민 선택 부정” 반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명 처분을 둘러싸고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당내 징계를 넘어 전북도민의 선택을 부정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 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도민 300여명은 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김관영 지사 제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도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전북의 자존심을 훼손한 정치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행한 김관영 지사 제명은 개인에 대한 징계를 넘어 전북 도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부정부정”이라며 “도민의 선택과 민의를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판단을 넘어선 권력 남용이며, 지역에 대한 명백

## “전북을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 즉각 중단해야”



전북 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도민 300여명은 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김관영 지사 제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 무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전북이 그동안 민주당에 보내온 정치적 지지와 역할을 강조했다. “전북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고,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흔들림 없는 지지로 중심을 지켜왔다”며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전북도민의 뜻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명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단 한 차례라도 제대로 청취했는지 묻고 싶다”며 “표가 필요할 때만 전북을 ‘민주주의의 성지’로 치켜세우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철저히 배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 “전북의 표심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며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을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주의는 침묵이나 인내가 아니라 행동과 선택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전북도민은 배신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도민을 무시한 정치세력에 대해 선거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이만호기자

# 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을 하루 앞둔 7일, 이원택 후보의 ‘식사·음주비용 제3자 대납 의혹’을 둘러싸고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안호영 후보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요구한 반면, 이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논란은 7일자 인터넷 판 의회신문 보도를 통해 촉발됐다. 해당 보도는 이 후보가 참여한 한 행사에서 발생한 식사 및 음주 비용이 제3자에 의해 대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회신문 보도 이후 지역사회와 정

치권 일각에서는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이원택 후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강하게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는 “문제가 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정책 간담회로, 본인이 주최한 행사가 아니었다”며 “개인 식사 비용은 직접 지불했고, 간담회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떠 이후 비용 처리 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 안호영 “명확한 해명 필요” vs 이원택 “허위사실, 법적 대응”

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의혹의 배정 역시 의심스럽다”며 “혹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는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호영 후보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면서도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현재 제기된 의혹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보도 내용만으로도 도민들이 느끼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최근 불거진 김관영 지사의 대리비 논란을 언급하며 “정

치적 사안에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는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나 부적절한 비용 처리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성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긴급 윤리감찰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논란이 경선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글로벌 서해안시대 특위 출범 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발대식과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 “우리마을 관리사무소 도입하겠다”

##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마을 관리사무소(가칭) 설치 공약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 거주민들이 전기·누수·배수 등 소규모 수선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익산 전체 주택의 25~30%를 차지하는 단독주택 거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동·인화동·평화동 등 원



도심 고령층과 신동·모현동·영등동 일대 여성 및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불편을 고려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마을 관리사무소는 간단한 전기·누수·배수 수리, 하수도 점검, 골목길 순환 재활용 관리, 택배 보관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공구 대여와 지역 철물점·설비업체 연계를 통한 수리 지원 기능도 수행한다. /이만호 기자

## ‘무주군수 출마’ 윤정훈 도의원, 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무주군수에 출마하는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 8일 오전 10시 30분, 무주읍 단산강변로 228,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무주의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며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나선다. 이번 개소식에서 △예산 6천여 시대

달성 △제값 받는 농업 △문화관광·태권도·동계스포츠 메카 조성 등 핵심 비전을 군민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전 주민 햇빛 연금을 통한 에너지 자립 군 도약 등 국민 체감형 공약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무주=송훈기 기자